

특별기고



배동진 전남도청 서기관

고향 친구들과 매달 한 번쯤 휴일 날 산을 오르며 정을 나누는 지 10여 년이 넘었다. 산행하던 어느 날 들머리 나무가지에 걸린 안내표를 보며 친구가 '우리도 단체이름을 갖자'는 것이다. 해서 '다솜산악회'에 '다솜'이란 사랑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 말'이라고 하니 친구들이 '참 예쁘다'며 '그게 좋겠다'며 '다솜산악회'로 이름을 지었다.

중국 글을 배우는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조선 세종임금은 당대의 뛰어난 언어학자인 신미스님, 집현전 학자들과 연구를 거듭해 백성들이 편하게 쓰도록 우리 글을 만든 지 575년이 되었다. 어느 문자든 만든 사람, 만든 날자 등이 명확한 문자는 없다. 그만큼 한글은 자랑스럽고 값진 유산이자 문화다. 그러나 당시 관료들과 지식인들의

자랑스러운 '한글'과 '우리말'

반대가 극렬해 공식 문서나 외교문서 등은 여전히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해 널리 사용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각자나 여염집 여자들은 시대를 넘어 대대로 우리 글을 배워 이어 왔으니 공적을 헤아릴 길이 없다. 민초들과 더불어 조선 후기 홍길동전, 속영남자전, 판소리 등도 우리 글 사용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푸대접받는 한글 우리가 아껴야

이렇듯 민초들은 사회지도층과 달리 우리 글을 지속 사용해 왔으며, 우리 글 사용이 확대된 때는 조선 말기 외세에 흔들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독립협회 등이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노력한 덕분이다.

여하튼 우리 글이 만들어진 지 수백년이 지났지만 지배층의 사대이념이나 외세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는 한자를, 일제시기에는 일본어, 미군정 시기 이후는 영어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례로 책을 파는 '책방'을 서점이라고 하고, 쌀을 찌는 '방앗간'을 정미소, '밥집'을 식당, '진지'를 식사, '빠른 길'을 일본에서 고소쿠도로라고 하니 우

리의 '고속도로'로, 땅보다 높게 만든 다리 '구름다리'를 고가도로, 호미, 낫 등을 만드는 '대장간'을 철공소, 술을 빚는 '도자집'을 양조장, '셋별'을 금성으로, '소젯'을 유유로 해야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배운나무', '뿌리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한국의 발견' 등 인문학 잡지를 펴낸 한창기 선생은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글이 있는 데도 외국 글을 사용하고, 타락지는 것을 우려했다. 도시의 거리마다 즐비한 영어 따위나 뜻도 모를 간판을 보노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그 분이 '뿌리깊은 나무'의 창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의 핏줄이 우리 몸을 빛는다면 몸을 다스리는 우리 열은 우리 말이 엮는다'고 할 때 말이 들어가는 굴인 '얼굴'을 안면으로, '오줌'을 소변으로, '있음'을 존재로, '산과 들'을 산수나 자연으로 부르고, 한국말 대신에 영어 등 외국 말을 쓰는 것은 마땅찮은 일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같은 한국사람끼리도 알아듣기 어려운 줄임말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줄임말을 사용해야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10대와 20대뿐 아니라 장년층들까지도

이런 외계(?)문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이 정작 자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해야 남들도 이쁘게 본다. 하물며, 한국사람이 한국말, 한국인의 글인 한글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외국인들 한국 노래 떴창 '전율'

최근 세계적인 아이돌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이 한글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속칭 '에미'로 불리는 팬들이 한국말로 된 가사를 따라부르는 등 한글말과 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뉴욕공연에서 수만명의 외국인들이 한국노래를 떴창을 하는 대목에서는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말과 글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할만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한국노래를 통해 한국말과 글을 배우려는데 우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한글날을 지내면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본다.

기고



박광재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서' 국민안전 책임지는 육상 재난대응기관으로

21세기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과 ICT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강국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재난 발생 형태는 대형화하고 복잡화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며 실제 시·도간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 출동은 3년간 연평균 1,379건에 이른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이천 불류창고화재, 부산사격장화재, 세월호 사고, 메리츠, 충북제천화재 등 외국인사상자 발생과 대형인명피해로 재난의 파급효과가 국가전체와 외교관계 등 국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재난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위험사회로 갈 수도 있음에 틀림이 없다.

소방은 바로 모든 육상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소방의 현실을 보면 시·도

지사 임명의 광역 조직으로서 시·도간 소방에 대한 투자와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편차가 갈수록 심화돼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화재진압(119안전센터)1일 근무 인원이 서울10, 경기6.4, 충북6.2, 경남5.5순이며 구조대 또한 서울7, 경기5.5, 충북4.5, 경남4 순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안전권을 시·도별 차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균등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일선분란한 현장지휘 및 책임 대응 소방지휘자 또한 지방직 소방서장이 국가직 경찰과 군을 통제하는 한계가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소방사무 또한 1975년 민방위제도 창설로 경찰과 소방이 분리하여 민방위 업무에 흡수된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 성격으로 소방 또한 같이 지방사무로 분류되었다.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업무 편의성과 조직 이권에 의해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소방의 국

가 및 지방 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12년 기준 7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증가원인으로 사회적·행정적 변화와 소방행정환경 변화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소방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무의 증가, 단순화제진압형의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도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에 전념하고 소방안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리하며 현재 풍수해, 자연재난, 산불과 같은 소방지원사무를 육상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사무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난대응을 지방→광역→국가 순으로 순차적 대응은 맞지 않으며 재난사고는 초기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피부로 느끼고 국회에서나 학술대회 등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국가 책임은 시대 역행이 아니냐 하는데 소방은 인명, 재산보호가 목적이며 일반 행정사무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은 분권, 즉 권한의 배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권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전 재능 같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 보호하는 사무가 소방이고 보면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소방청 설립은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다시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직접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자는데 의의와 정부기능에 소방을 단위사무로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전 만해도 소방은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병축한 현실이었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다니는 소방관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휴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방관들이 순직할 때 마다 이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란 했지만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소방관 순직은 바로 국가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자기전직과도 관계가 없으며 그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 대응, 복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한 효과적 관리,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 지휘체계의 일원화, 소방재정문제의 해결, 안전 불평등 문제의 해소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기고



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 폴리스라인

우리는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여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시위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일단 집회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불법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는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을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장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

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경찰관 부상을 비롯하여, 기물 파손,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평온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

발암물질 '석면' 교실서 당장 걷어내라

광주전남지역 학생들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둘러싸인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하게 됐다. 광주전남 교육청이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도대체 어떤 교육현안이 아이들 건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석면 조사결과 전남은 207만2,398㎡ 가운데 현재까지 36만4,855㎡를 제거하고 나머지 170만7,543㎡의 석면은 예산 등의 문제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의 석면제거율은 37.4%로 세종시(68.1%) 다음으로 낮았다.

전남교육청의 학교석면 제거율은 겨우 17.6%로 아직 82.4%에 달하는 석면은 여전히 교실 곳곳에 남아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석면 제거율

이 비교적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3.6%는 아직 그대로이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로 범벅이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석면제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석면제거 공사비로 235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208억원이 줄어든 27억원만이 세웠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207억원에서 올해 38억원이 삭감된 169억원만 편성했다. 올해 전남은 석면제거 공사비로 197억원을 교부 받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석면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교육청은 그 어떤 사업보다 석면제거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행 불편 일곡지구 노점상 정비하길

광주 일곡지구에 불법 노점상들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인도로 통행하기조차 불편할 지경이라고 한다. 영세상인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도심 거리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자치단체는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광주 북구 일곡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진입로 입구 주변에 노점상들이 길게 장사전을 치는 바람에 인도 통행은 물론 주변으로 차량이 지나가기도 크게 불편하다고 한다. 노점상들이 타고 온 차량이 도로 1개 차선을 차지한데다 인도위에는 좌판이 펼쳐져 도로와 인도 모두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좌판과 파타술을 피해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 역시 노점상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넘나들면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인도와 도로위 모두 그야말로 시장통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할 북구청이나 경찰 모두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영세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단속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어 주변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노점상이 시민들의 통행에까지 불편을 끼칠 정도라면 당연히 구청이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 강제적인 철거보다는 상무시장 이전 사례처럼 구청과 노점상인들간 합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직공정 '음주 후' 자전거 운행 절대 안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음주 후 자전거 운행도 해선 안 된다. 자전거 열풍이 일면서 자전거 운행이 부쩍 늘었다. 건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자전거 타기에 붐이 일어 지금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일부가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천만하다.

해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그동안 음주 후 자전거를 타더라도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마음 놓

고 자전거를 타곤 하였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행을 한 사람에게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약 1,073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음주 자전거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복 고령경찰서 풍양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학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정정호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기획실 (062) 720-1005	기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광고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062) 720-1016-17 E-mail jnmi1000@hanmail.net 					
사회부 (062) 720-1050-54	논단국 (062) 720-1006-0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회2부 (062) 720-1043-45	관리국 (062) 720-1012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제 다원인쇄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판매국 (062) 720-1098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							
편집부 (062) 720-1070	광고국 (062) 720-1016-17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